

참여정부에서도 수도권 집중 여전

# 제조업체 57%·금융 67% 공공청사는 85%나 몰려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국정 과제로 내세워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했음에도 수도권 집중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역대정권에서 지역불균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참여정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 구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 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지역균형발전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은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과밀 상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 수도권 집중화를 우려하게 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과 균형발전정책 = 지난 1962년부터 1996년까지 7차례 걸친 중앙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추진과정에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위주의 국가성장 일반도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부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새 정부서도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 방침 밝혀

지방 이전 공공기관 민영화 검토에 지역민 반발

수도권 집중 문제

■수도권 집중도

구분	2002년 집중도	2006년 집중도	
국토	11.8	11.8	
인구	47.2	48.3	
산업	취업	46.4	49.1
	실업	56.8	58.6
제조업	지역총생산	48.7	47.7
	사업체	56.4	56.6
서비스업	종업원	46.1	46.3
	사업체	45.7	48.1
대학교	종업원	50.6	55.6
	학교수	40.5	39.3
의료기관	학생수	38.1	38.1
	기관수	45.5	50.4
금융	예금	68.2	67.8
	대출	66.0	66.7
자동차	총대수	46.5	46.2
	승용차	48.8	48.4
공공청사	소계	85.4	85.4
	중앙행정기관	83.6	83.9
	소속기관	79.6	86.8
	정부투자기관	95.2	88.5
	정부출연기관	77.4	75.3
	정부출자기관	60.0	93.8
개별공공법인	76.0	93.4	

(건설교통부)

가 부각되면서 수도권 인구과밀 억제에 대한 기본지침과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 제정되는 등 수도권 집중을 견제하는 정책들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참여정부 들어서는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강제(?) 지방에 이전시키고 동시에 신 행정수도할 수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지방에 건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수도권의 국토면적(2006년 말 기준)은 11.8%에 불과하지만 인구비중은 48.3%로 일본(31.9%), 영국(31.2%), 프랑스(18.9%) 등 OECD국가 중 최악의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의 56.6%, 금융(예금·대출) 67%, 공공청사의 85.4% 등 정보·교육·취업·금융·문화 등 제반 여건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상황이다.

경제적·사회적 기회와 여건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은 산업기반 부족 및 인구 유출로 자생적 성장 동력을 상실한 지 오래다.

참여정부 동안 균형발전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도권 집중도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 = 새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수도권 공장 총량제 등 규제가 완화 방침이다. 정치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4개 법을 12개 법안이나 된다.

◇균형발전정책 지속돼야 실효 = 차기 정부가 기업도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임과 동시에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의 우려와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참여정부가 광주·전남과 제주 등 5개 혁신도시와 행복도시, 기업도시에 대한 착공식을 갖는 등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아직 사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어 차기 정부에서 자칫 수정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이들 정책이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미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각 지역도 각종 정책을 이들 사업과 호흡을 맞춰 진행하고 있는 만큼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지역의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40년 이상 전개됐던 중앙 위주의 정책이 단 4~5년 만에 급변할 수 없는 만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새정부에서도 지속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인수위의 조각명단 발표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나라당(오른쪽)과 통합민주당(왼쪽)이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민주 대화단절 속 책임 공방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9일 정부조직 개편 협상 결렬을 놓고 책임공방만 주고 받으며 정국대치가 극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인수위는 이날 오후 13개 부처 장관과 2명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극한 대결국면 속에 대화 분위기가 실종된 상태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파행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어 이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하지만 조각명단이 일방적으로 발표된 상황에서 민주당이 태도를 바꿀 명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명박 당선인 측과 인수위는 이날 언론매체를 활용해 '비상조각' 단행의 불가피성을 적극 홍보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21일 새 정부 국

강재섭 “다수당 횡포... 국민의 심판 받을 것”

손학규 “한마디로 민주주의 앞섰다는 발상”

정운영 과제에 대한 예비 당협의를 갖기로 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태세여서 민주당과의 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인수위는 이날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으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조직개편 협상결렬의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며 날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 측이) 발목을 잡고 뒷다리를 거는 바람에 (새 정부가) 뒤떨어지면서 출발하게 됐다”며 “세계사에 없는 횡포이며, 선거용 정략인지 모르겠지만 정략치고는 굉장히 어설픈 정략이다. 결국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에서 조각발표 강행과 관련, “어제 저녁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했다”면서 “이것은 한 마디로 민주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며 야당은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이 당선인 측을 맹공격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인사청문회와 관련,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날이다. 청문회를 받자니 불법과 편법에 동승하는 꼴이고, 안 받으면 한나라당이 발목 잡기라고 할 것이어서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며 “청문회를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몇몇 장관들은 두번 임명해야 하는데 두번 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지 방법을 알려주면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인수위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늦어도 내달 20일후 장관 임명 가능

■ 국무위원 청문·임명 절차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18일 밤 전격적으로 비상조각 명단을 발표함에 따라 장관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및 임명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수위는 19일 오후 국회에 현 정부 직제에 따른 13개 부처 장관 및 국무위원 내정자 2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요청안이 제출된 지 20일 이내에 끝내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달 10일까지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국회가 부득이한 사유로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끝내지 못할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장관 임명 시점은 가장 3월20일 이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가운데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에 ‘협조’할 경우, 장관 임명이 이달 내로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도 ‘인사청문회 불응’을 시사했던 전날과는 달리 이날에는 다소 누그러진 입장을 보이고 있어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당분간 국무위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 각료 새정부초까지 유임 가능성

추당선인도 사표 수리 않을 듯

참여정부 마지막 장관들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당분간 국무위원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각료들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 국무위원이 없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참여정부 각료들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 정부 각료들의 사표 수리 여부는 새 정부의 몫으로 넘어갔지만, 법률적으로 국무회의 ‘부존재’ 상태를 초래하지 않기 위해 이 당선인측도 새 각료들이 인사청문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당장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가 현 장관들의 사표를 수리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는 오는 25일부터 새 정부 각료들이 임명되는 시점까지 국무위원이 존재하지 않게 되며, 이 기간에 정부에서 처리해야 할 긴급 사안이 생길 경우 국무회의조차 열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주요한 정책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정의 기본계획과 일반정책, 주요 대외정책, 헌법개정안, 법률안, 대통령령안,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사면·감형과 복권 등 정부의 주요 정책사항이 총망라되어 있다.

현 정부 각료들의 사표 수리 여부

**(주) 조이트레블**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가 27번길 2  
대표전화 (062) 234-3222

**신입 주택 분양**

- 310,000
- 349,000
- 429,000
- 449,000
- 499,000
- 279,000

**NEW 광주출발(대한항공)**  
전일장 특급(5성급)호텔 사용!!

- 상해 / 스주 / 뽈리(파리) / 할부 4일 459,000
- 북경 / 천리항 / 무궁화국제 4일 499,000
- 상해 / 천주 / 뽈리(파리) / 서울 4일 599,000

**대만**

- 649,000
- 649,000

**미국**

- 199,000
- 189,000